

# 2021년 제2회 대한민국 도시포럼 (KUF2) 개최 계획

## ■ 본 행사 개요

- **(행사명)**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
- **(목 적)**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기여하는 메가시티리전 전략과 이행과제 모색
  - 메가시티리전과 관련된 정책 현안과 실증 경험의 성과 공유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을 위한 발전 의제와 약속 도출

\* 전년도 제1회 포럼에서 합의한 미래 도시의 원칙으로 해당 연장선에서 구체적 안건 논의
-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09:00 개회 – 18:00 폐회
- **(장 소)** 서울드래곤시티호텔 3층 그랜드볼룸 (용산구 청파로20길 95)
  - \* 오전 : 1부 한라홀 1, 2 (본행사) + 신라홀 (세션 1, 세션 2, 세션 3) 동시운영
  - \* 오후 : 2부 한라홀 1, 2 (본행사) + 한라홀 3 (특별세션) + 신라홀 (세션 1, 세션 2, 세션 3) 동시 운영
- **(주 최)**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 한겨레신문사
- **(주 관)** 지속가능도시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후 원)** 대한민국국회,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도시위원회
- **(참 여)**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연구원, 건축공간도시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스마트도시건축학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스코 등

## ■ 본 행사 계획

시 간	식 순	내 용	비 고
<b>제1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b>			
09:00 – 09:50 (50분)	<b>개회식</b>	개 회 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최기록 환 영 사   한겨레신문사 김현대 대표이사 특별축사 1   국무총리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특별축사 2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특별축사 3   박형준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특별축사 4   국회 김종민 국회의원 (특별대표단) 특별축사 5   UN-Habitat Rafael Tuts 글로벌솔루션 실장 특별축사 6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	개회식 후 단체 사진
09:50 – 10:00 (10분)	<b>비전 선포식</b>	<b>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을 위한 대한민국도시포럼의 비전</b>   대한민국도시포럼 참석자 전원	
10:00 – 10:20 (20분)	<b>기조연설</b>	<b>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의 메가시티리전</b>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b>자치분권을 통한 상생발전과 메가시티리전</b>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기조 연설 각 10분
10:20 – 10:30 (10분)		<b>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현안과 과제</b>   대한민국도시포럼 김인희 사무국장	
10:30 – 11:15 (45분)	<b>주제발표</b>	<b>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b>   산업연구원 김선배 센터장 <b>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장소적 통합과 기능적 융합</b>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 <b>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리전의 거버넌스 전략</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정숙 센터장	주제 발표 각 15분
11:15 – 12:30 (75분)	<b>패널토론</b>	<b>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초광역 협력 전략과 실현과제</b> 좌장   대한민국도시포럼 김도년 위원장 (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 패널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학회장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   스마트도시건축학회 한만희 학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 부원장	연사 발언 각 7분 + 질의 응답

12:30 – 13:30 (60분)	<b>점심식사</b>	한라홀 본 행사장에서 진행 (초청자 300명 대상)	
<b>제2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현안과 과제</b>			
13:30 – 13:45 (15분)	<b>개회식</b>	특별축사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 특별축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 특별축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	
13:45 – 14:00 (15분)	<b>기조연설</b>	<b>국토공간구조 재편과 지역 거점 메가시티</b>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학회장	
<b>[세션 1] 메가시티리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현안과 과제</b>			
14:00 – 15:40 (100분)	<b>주제발표</b>	①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교수 ② 경남연구원 하경준 연구위원 ③ 광주전남연구원 최우람 연구위원	발표 각 15분
	<b>패널토론</b>	좌장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 패널   국토연구원 박경현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교수 경남연구원 하경준 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최우람 연구위원	토론 55분
15:40 – 16:00 (20분)	<b>휴식</b>	<b>음료 및 다과</b>	
<b>[세션 2] 스마트시티 정책을 고려한 도시-농촌 상생형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리전</b>			
16:00 – 17:40 (100분)	<b>주제발표</b>	①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 ②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 ③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실장	발표 각 15분
	<b>패널토론</b>	좌장   서울연구원 김인희 실장 패널   국토교통부 박희민 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권세현 처장 매일경제 이지영 차장 위니텍 백두현 이사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실장	토론 55분
17:40 – 17:50 (10분)	<b>폐회식</b>		

## 2021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KUF2)

#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

*Megacity region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f Korea*

20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나머지 지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것은 이미 2015년의 일입니다.

지방은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도 인구와 지역총생산은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방 인구 중 직업을 얻기 위해 유출되는 인구의 비율은 2016년 16%, 17년 31%, 18년 53%, 19년 64%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방 도시가 현재 경제적 여건은 물론 미래 성장 기반이 미흡한 가운데 인구 유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발전은 지방 도시에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격차를 방치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갈등 유발과 국가 전체의 발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 정주 여건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혁신도시,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등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의 문제를 지방을 넘어 전 국토 차원에서 접근하는 통합적인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메가시티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 단위의 정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은 기계적인 공평(equality)을 추구하는 것에서 질적인 형평(equity)을 추구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일괄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닌 지역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 지구적 단위에서 기후변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형 도시

모델을 실현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도시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선택, 집중하기 위해서는 합의 가능한 기준, 원칙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의, 성장주의, 대중융합주의 등에 치우치지 않는, 성숙한 메가시티리전의 장기적이고 합의 가능한 원칙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생존전략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전략은 광역 단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 조성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와 '성장'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통한 메가시티리전 차원의 발전일 것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소외시키는 대도시 중심의 성장이 불러올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와 집적의 편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한겨레신문사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토론, 모범 사례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정책결정권자의 인식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집단 지성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실현전략으로 '메가시티리전'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UN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에 대한 인간 중심적, 미래지향적 시각을 바탕으로 메가시티리전이 불러올 총체적인 효과를 다각적으로 종합하여 '누구도 어느 장소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리전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차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이 이러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새로운 도시 의제(NUA)의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논의를 한 차원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 1부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

메가시티의 성장 속도는 전체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UN의 전망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인구 중 도시지역의 인구는 53.3%, 이중 인구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에 거주하는 인구는 6.9%였습니다. 2030년 이 비율은 각각 60.4%와 8.8%로 상승하여 2018년 33개에 불과했던 메가시티의 수는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성장, 특히 메가시티의 등장은 인구의 자연 증가와 도시로의 이주 증가가 두드러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자연 감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도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자치권을 가진 초광역 권역인 메가시티를 조성함으로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메가시티 담론과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메가시티 관련 논의는 각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앙정부, 국책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정책 역시, 지역 현안 사업, 단기사업, 대규모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초광역권 형성을 위한 지역 주도의 상향식 활동이 활발해지고 행정통합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메가시티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만병통치약일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여전히 메가시티, 즉 대도시 중심의 지역발전 담론은 지방 소도시와 농촌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메가시티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 단위의 지역발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자치권을 가진 서로 다른 자치단체를 하나의 목표 아래 협력, 연합,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가시티리전의 경쟁력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예측되는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일련의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선택, 집중하기 위해서는 합의 가능한 기준, 원칙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리전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의 장입니다. 이에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의 1부 세션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등장한 메가시티리전의 원칙과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 1부 세션에서 이루어질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토론과 의견 공유는 이해관계 및 정책결정권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집단 지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 1부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

<b>기조연설 ①</b>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의 메가시티리전
<b>기조연설 ②</b>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 국가 자치분권을 통한 상생발전과 메가시티리전
<b>주제발표 ①</b>	대한민국도시포럼 김인희 사무국장 -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현안과 과제
<b>주제발표 ②</b>	산업연구원 김선배 센터장 -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
<b>주제발표 ③</b>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 -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공간적·기능적 통합 방안
<b>주제발표 ④</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정숙 센터장 - 메가시티리전의 거버넌스 전략
<b>패널토론</b>	(좌장)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김도년 위원장
	-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학회장 -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 - 스마트도시건축학회 한만희 학회장 -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 부원장

## [ 2부 : 세션 1 ] 메가시티리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현안과 과제

20세기 초, 글로벌 경쟁 시대에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을 집중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를 견인하는 경제권 전략이었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메가시티는 국가의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지만, 일부 대도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큰 도시 즉, 메가시티 단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메가시티는 일반적으로 인구 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의미하지만, 메가시티의 경쟁력은 인구 규모나 면적의 거대성보다는 다양한 연결성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메가시티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도시 기능과 자원을 유연하게 연결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의 규모의 경제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논의의 수준은 메가시티 대도시권과 그 배후지역을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역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 이분법적 담론이 메가시티리전에 해당하는 지역 전체에 걸친 협력적 발전과 기능 간 연결의 담론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균형발전 논의에서 벗어나 지방거점 도시를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에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의 세션 1에서는 일찌감치 메가시티 관련 논의를 추진해오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과 광주·전남 호남권의 두 광역권을 메가시티리전의 차원에서 다룹니다.

광역권 내 대도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하나의 메가시티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은 동남권과 호남권을 포함한 모든 광역권에서 지향하는 공통의 목표일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 산업기반 강화, 행정 추진체계 구축 등은 중앙정부와 조정, 협의를 통해 일시적인 지원을 받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과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역할 모델과 함께 메가시티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과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칙 설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메가시티리전의 다핵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 기능을 구상하고,



거점 주변의 중소도시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공간, 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광역 협력사업이 활발해지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과 함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메가시티리전은 지금까지 추진된 적 없었던 새로운 연합·통합 모델인 만큼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거점 메가시티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전략과 산업정책이 성과를 얻으며 수도권 중심주의를 완화하더라도 광역권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가시티 실현을 통해 지역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효용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 2부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현안과 과제

<b>기조연설</b>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학회장 - 국토공간구조 재편과 지역 거점 메가시티
<b>2부 세션 1 : 메가시티리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현안과 과제</b>	
<b>주제발표 ①</b>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교수 -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공간구조와 정책
<b>주제발표 ②</b>	경남연구원 하경준 연구위원 - 동남권 메가시티의 진행 경과와 통합 로드맵
<b>주제발표 ③</b>	광주전남연구원 최우람 연구위원 - 광주전남 광역생활경제권
<b>패널토론</b>	(좌장)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 - 국토연구원 박경현 연구위원 - 경기연구원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 -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센터장 -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교수 - 경남연구원 하경준 연구위원 - 광주전남연구원 최우람 연구위원

## [ 2부 : 세션 2 ] 스마트시티 정책을 고려한 도시-농촌 상생형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리전

서울은 600km<sup>2</sup>의 면적에 1,000만 인구를 수용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11,850km<sup>2</sup>의 면적에 2,600만 인구를 수용합니다. 인구 800만의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엮는 동남권의 면적은 서울의 20배가 넘는 12,370km<sup>2</sup>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메가시티리전이 운영되는 모습이 매우 다르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비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이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인프라 투자의 효과성과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자리를 찾는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유발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 체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메가시티리전에서는 적정 밀도를 유지하는 보행 중심의 생활권 단위에서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관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메가시티리전이 가진 초월적 공간 단위가 아닌,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인 개별 생활권을 통해 메가시티리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의 비효율성이 지역 쇠퇴, 고령화와 딜레마를 형성하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은 혁신 생태계의 임계 규모를 달성하기 어려운 지방의 산업·경제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농촌과 다른 농촌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거주자 모두에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ICT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공간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이러한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는 더 나은 연결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공급합니다. 따라서 ICT 기술은 결과적으로 전 국토를 스마트화하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리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ICT 기술을 접목해 한정된 자원과 비용으로 지방과 농촌의 기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스마트시티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농촌이 가진 문제는 일반적인 도시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스마트시티가 필요하며, 지리적으로 분

산되고 생활 인프라가 미비한 농촌에서는 특히 스마트기술에 기반한 중소규모의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메가시티리전 단위의 산업 경쟁력을 발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에는 빅데이터와 같은 스마트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의 세션 2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메가시티리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스마트시티의 기회와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스마트 국토의 메가시티 플랫폼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수도권 거점과 지방 메가시티 거점, 지방 메가시티 거점과 다른 거점, 거점 도시와 농촌, 농촌과 다른 농촌 등 유연한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메가시티리전 단위의 효과적인 도시, 농촌 간 연결은 물론,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성,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기술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부 세션 2 : 스마트시티 정책을 고려한 도시-농촌 상생형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리전	
주제발표 ①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 -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원체계구축
주제발표 ②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 - 스마트시티를 고려한 메가시티 구조와 생활권 형성체계
주제발표 ③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실장 - 인구 감소 시대의 스마트 지방공간구조 체계와 생활편익시설 정비 전략
패널토론	(좌장) 서울연구원 김인희 실장  - 국토교통부 박희민 과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권세현 처장 - 매일경제 이지영 차장 - 윈텍스 백두현 이사 -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실장

## ■ 일반세션

UN-HABITAT는 20년마다 개최되는 해비타트 회의의 제3차 회의(HABITAT III, 2016)를 통해 ‘새로운 도시 의제(NUA / New Urban Agenda)’를 공표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UN-HABITAT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원칙과 약속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UN-HABITAT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미래 이상적인 도시와 인간 정주의 모습을 ‘지속가능(Sustainability)’하고, ‘포용적(Inclusive)’이며 그리고 ‘회복탄력적(Resilient)’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UN-HABITAT는 개발도상국가가 현재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와 공공재를 구축하는 과정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가 마주하게 될 ‘도시화(Urbanization)’라는 불가피한 과정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충격과 위기에서도 곧 회복이 가능하고 어느 누구도 어느 장소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UN-HABITAT가 제시하는 보다 나은 미래의 도시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 분	신라홀 1, 2, 3		
	신라홀 1	신라홀 2	신라홀 3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13:30- 15:30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도시공간	문화적 포용성의 증진과 도시발전	회복탄력성 기반의 탄소중립 지역발전 국가모델 개발 전략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 국토연구원
15:30- 15:45	2부 세팅 및 쉬는시간		
15:45- 17:45	지역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포용도시와 도시권	기후변화 영향에 직면한 도시 : 사회적 도시회복탄력성 강화
	사회적공유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 아시아연구소	사회적도시건축가그룹

## ■ 특별세션 (Special Session on Floating Cities)

전 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해안에서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10명 중 1명은 해발 10m 미만의 해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의 약 90%가 해수면 상승에 취약합니다. 대다수의 해안 지역이 해안 침식과 홍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과 기반 시설이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UN은 2019년 4월, 뉴욕 본부에서 “제1회 지속가능한 해상도시에 관한 UN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24억 인구를 위한 혁신적인 도시 모델로 “부유식 해상도시(Floating City)”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유식 해상도시(Floating City)” 구상은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물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자급자족 공동체를 지향하며,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해 공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모듈식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수요 변화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건축물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생애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모듈식 구조 기반의 스마트 공간 플랫폼은 도시에서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같은 해안 도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본 특별 세션은 기후변화 시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유엔의 미래형 해상도시 모델을 부산광역시에 세계 최초로 시범 조성하게 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의 해상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집단 지성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세션에는 전 세계 도시와 정주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국제기구인 UN-Habitat와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해상도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과 과제,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는 2019년의 UN 고위급 원탁회의에 이어 미래 해상도시가 계획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미리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제 목)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 (목 적) 해상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상과 실현전략 모색
-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14:00 - 17:00
- (장 소) 서울드래곤시티호텔 3층 그랜드볼룸 한라홀 3
- (주 최) 유엔해비타트
- (주 관)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
- (후 원) 스마트도시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포스코, 부산광역시

시 간	식 순	내 용
14:00 - 14:20 (20분)	개회식	개회사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 대한민국도시포럼 김도년 위원장 환영사   UN-Habitat Rafael Tuts 글로벌솔루션 실장 축 사   부산광역시 김광희 도시균형발전실장
14:20 - 14:40 (20분)	기조연설	MADAMOMBE ITAI co-Founder and President, OCEANIX
14:40 - 15:20 (40분)	주제발표 ①	UN-Habitat Florian Lux 인간정주 담당관
	주제발표 ②	한국해양대학교 이한석 교수
15:20 - 16:50 (90분)	패널토론	<b>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상도시</b> 좌장   한국해양대학교 송화철 교수 패널   국토연구원 임영태 연구위원 부산광역시 이현우 도시계획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진학 연안개발센터장 포스코 고광호 Smart Housing Platform TF팀장
16:50 - 17:00 (10분)	폐회식	기념 촬영